

| 제 6 장 |

포로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포로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한국전의 총소리가 멈춘지도 어언 60여년, 조국의 위기에 꽃 같은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켰건만 조국은 적지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이제는 80대의 인생 끝자락에 매달려있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고있다.

‘동족끼리’를 구두선처럼 뇌까리는 북한 조선인민공화국도 같은 민족인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한 일체 그 존재를 부정만 하고 있어 같은 민족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서 일부는 우리의 무력으로라도 그들을 탈환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퇴역 장교들도 있었다. 다음은 그 중 몇가지 한국정부 내에서 검토한 방법들을 열거한 것이다.

a)엔테베(Entebbe)식의 구출작전:⁵¹

한국의 퇴역 장교단 일부에서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Entebbe Raid)처럼 우리도 특공대를 직접 보내 구출작전을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또한 국군포로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거나 수용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엔테베 작전 같은 것

51 ‘벼락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불린 ‘엔테베구출작전’(Entebbe Raid 1976년 7월 4일 새벽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우간다의 엔테베에 인질로 잡혀있던 유대인 승객 200여 명을 이스라엘 특공대가 지휘관 단 한사람의 전사자만 내고 순식간에 전원 구출한 작전을 말함.

은 감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엔테베 작전은 이스라엘 정부의 단호한 결심과 또 납치된 자들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었고 그 숫자도 불과 200여명밖에 안되었다는 점에서 억류 국군포로들 문제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며 이는 단순히 감정론에 사로잡힌 실현성이 전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b) ‘전시중 생사 불분명자’ 들⁵²이라는 이름으로서의 교섭:

노무현 정권 말기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이북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포로’, ‘납북자’라는 말을 대신하여 ‘전시중 생사 불분명자’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과 교섭하려 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이 곧 끝남으로써 북한과 접촉할 시간도 없이 불발탄으로 끝났다.

c) FREIKAUF⁵³ (돈으로 자유를 사는) 방법:

노무현 정권 뒤를 이은 보수파 이명박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포로송환 문제에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즉시 이명박 정권에게 김대중의 6.15 공동성명과 노무현 정권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를 촉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명박 보수정권과는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는 성명서와 함께 일체 공식 접촉을 중단했으며 이후 정국은 경색일로로 치닫게 되었

52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에서는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납북자”는 모두가 “자진 입북한자”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때 남북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를 그해 11월의 남북간적십자 회담에서 토의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11월의 적십자 회담에서 남한대표가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문제를 토의합시다”라는 말이 떨어기가 무섭게 “납북자는 무슨 납북자나 모두가 자기 발로 걸어 입북한자들인데 그따위 소리하려면 회담 집어치우라오” 하면서 나가버려 회담이 성사되지못한 전례가 있었다.

53 Freikauf란 서독이 동독에 수용되어있던 정치범들을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서독으로 데리고 온 방법으로 1964년부터 1989년 동독 붕괴까지 지불한 돈이 3.4억 DM (1990년도 환율로 환산 \$2.3,4 billion)을 지불, 33,755명을, (1인당 4,000 말크식 지불하고) 데리고 왔음. 이 액수는 서독이 1964년부터 1989년 까지의 한 경제원조를 포함한 것이며 현금외에도 물자로 지불한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임.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주의 동독 정부가 Freikauf 지불에서 일반 노동자는 1인당 1,875DM, 박사 및 의사는 1인당 11,250 DM를 받고 석방했다는 사실이다. (Wikipedia의 German Ransom란 참조)

다. 따라서 남북간의 기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의할 형국이 못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포로문제를 독일의 Freikauf(돈으로 자유를 산다는 뜻) 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주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자는 안도 국방부 내에서 토론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실무 최고책임자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었지만 현재까지 결론도 실천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독일과 한국의 입장이 좀 다른 점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동독과 서독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따라서 상호간 적대감이 남아있지 않고, 또한 포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는 동독은 북한 처럼 일인세습 독재 체제가 아니었다. 셋째는 Freikauf식이라도 포로라는 이름으로서는 포로가 없다고 선언한 김일성 세습 왕조 체제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3세인 손자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한국전과는 별로 기억도 연고도 없는 자로서 지금 새삼 포로 문제를 언급해야 관심이나 가질지도 의문이다.

d) UN을 통한 방법:

포로송환 문제는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북한의 협력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 북한과 협상할 기회를 가져 그들의 협력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몇차례의 회담에서 북한은 항상 북한 안에는 포로가 없다는 공식 입장만 견지해왔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간 대치 상황은 남북 회담의 기회나 또한 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치국면에서 본 송환위원은 몇 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UN의 주도하에 인도적인 면에서도 남북이 서로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UN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는 북한과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끝내 북한이 UN의 중용에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그렇다고 수

만명의 포로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만일 한국정부에서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면 북쪽과 비공식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때 가능한 많은 국군포로들도 가족 상봉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사실 장교출신을 제외하고 사병의 경우 남한에 연고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상봉 때 한국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들에게 전사자에 지拂하는 정도의 보상(외화 현금으로)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북쪽에서 남은 여생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못다한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UN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촉했다거나 어떠한 제안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6·25 초전의 위기 때 그토록 “조국을 지키라”고 애원 절규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의 이 번영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닐까.

더욱이 선진국들이 자기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한 병사의 유해, 유물이 나 또 포로 구출에 쏟는 그 정성들과 비교하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또 다시 국가 위기가 올 때 과연 뭐라고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도록 호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나라를 지키라고 호소한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국가위기가 닥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나라에 충성심을 발휘할지 염려하는 것이 단순한 노파심으로만 끝났으면 한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남한의 풍요 속에서 북한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러한 면에서도 남한의 국민들 또한 그 희생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날 굶주림을 피해 북한에서 탈북해오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뻗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나 곤궁에 빠진 같은 민족을 돕는다는 면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고귀한 정신임은 말 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반면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이다. 전자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준 적도 없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적도 없지만 국군포로들은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지켰고 오늘날의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탈북자 구호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필자는 굶주림과 폭정에 못건디어 탈북해온 동족을 외면하자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다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